

문화방송노보

무단협 1777일째
지명파업 604일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김사이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11월 28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김장겸 일당 미묘미묘 리딩 조작적 증거 인멸

업무용 스마트폰 통째로 연쇄 파쇄



김장겸 일당의 위법 행위가 또 드러났다. 증거 인멸을 위한 ‘스마트폰 파쇄’. 수사망에 포착된 범죄 집단처럼 증거부터 없애려고 한 것이다. 김장겸 전 사장은 물론 백종문 전 부사장과 임원급 부역자들까지 일제히 가담했다. 공영방송을 지키겠다고 우기던 자들의 본모습이다.

멸절한 새 스마트폰 일제히 파쇄

지난 8월 14일, 김장겸은 실무 부서에 황당한 지시를 내린다. 자신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8 플러스를 파쇄하고, 새 스마트폰을 달라는 것이었다. ‘두 달도 안 된 새 제품’이라는 실무진의 문제제기는 소용없었다. 당시 사장 비서는 김장겸의 갤럭시가 완전히 조각난 걸 확인하고 나서야 돌아갔다. 백종문도 신형 스마트폰을 두 달 만에 갈아버렸다. 지난 6월에 받은 갤럭시 S8을 8월 22일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부숴는데, 정작 새로 받은 스마트폰은 이전과 같은 기종인 갤럭시 S8, 색상도 ‘블루 코

랄’로 똑같았다. 김성근, 윤동렬 본부장도 갤럭시 S8 플러스를 같은 제품으로 교체했다. 최기화 사장 직무대행은 석 달 된 스마트폰을 갑자기 해지하고, 대신 중고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비 스마트폰 교체, 김장겸은 ‘한 번 더’

멸절한 스마트폰을 파쇄한 이유는 간단하다. 다가오는 수사에 대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현장 조사가 7월 중순 끝났고, 8월 중순부터 백종문과 최기화 등의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이를 앞두고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 메모 등이 담긴 스마트폰을 파쇄한 것이다. 김장겸도 스마트폰을 없앤 지 3주쯤 지나 노동청에 출석했다. 김장겸은 8월에 이어 10월에도 스마트폰을 바꿨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과 관련해 전영배 MBC C&I 사장을 불러 조사한 직후였다. 전영배는 2011~2012년 보도본부장을 지내며 국정원에

MBC 내부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실세’ 김장겸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정치부장이었다.

증거 인멸? 구속이 답이다

김장겸 일당의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행위는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압수수색으로는 부족하다. 김장겸 일당을 구속해야 또 다른 증거 인멸 시도를 막을 수 있다. 회사 공금 유용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불법 행위를 위해 스마트폰을 파쇄하고 새로 산 자금은 다 회삿돈이었다. 신형 스마트폰 한 대 100만원, 적폐 경영진이 쓴 돈이 줄잡아 1천만 원에 달한다. 관용은 없다. 조합은 증거 인멸 증거를 서울서부지검에 이미 제출했다. 문서 파기 등 증거 인멸과 부당노동행위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반성하기에도 늦었다. 법의 심판은 멀지 않았다.

‘범죄조직’ 처럼 일사불란하게 2주 만에 7명 집중 파쇄·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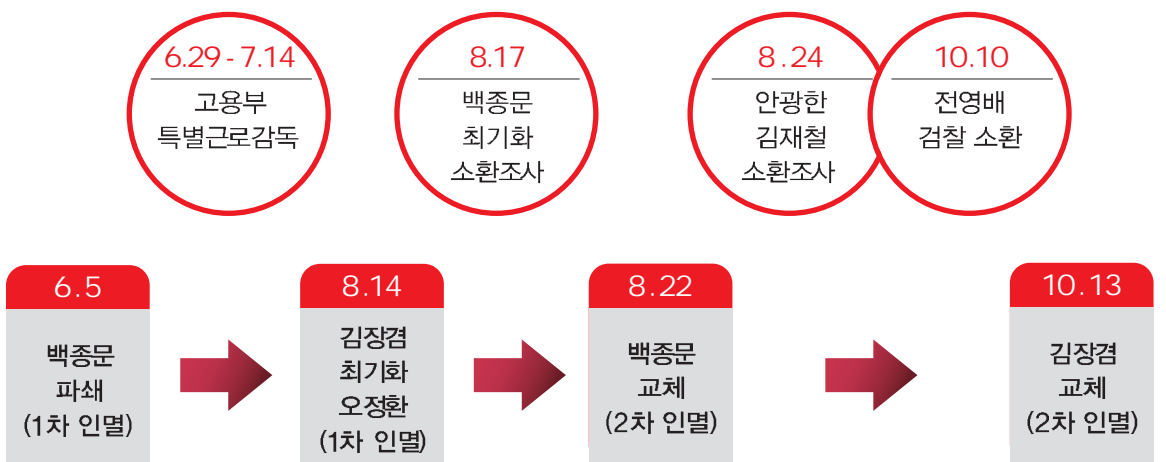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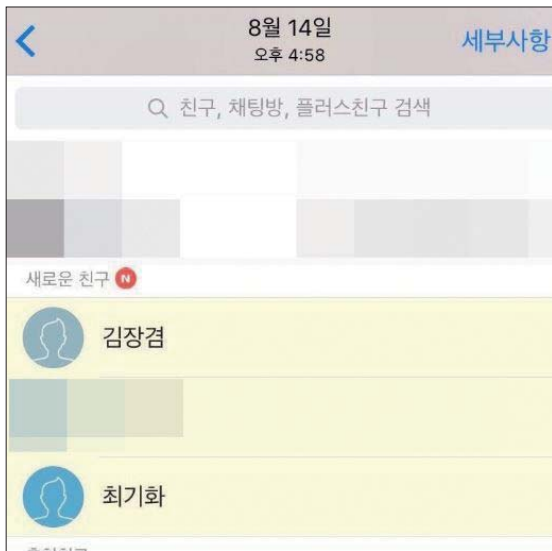
임원들의 조직적 ‘은폐’ 행위가 집중된 것은 지난 8월 중순경부터다. 김장겸을 비롯한 최기화, 오정환 등 주요 임원 3명은 8월 14일 하루에 약속이나 한 듯 휴대전화를 파쇄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MBC 사내 구성원들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한꺼번에 ‘새로운 친구’로 표시되기도 했다. (사진) 휴대전화를 바꾸면 이런 방식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서둘러 휴대전화를 없앴을까. 이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고용노동부는 MBC 사측이 벌였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임원들이 휴대전화를 없애기 시작한 8월 중순은 바로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소환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소환조사 앞두고 불리한 증거 인멸

실제 임원들의 집단 증거 인멸이 발생한 직후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최기화 당시 기획본부장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사흘 뒤인 17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8월 들어 수차례 출석 요구서를 받았던 김장겸 당시 사장은 이를 무시하다 결국 9월 1일 체포영장이 떨어진 뒤에야 조사에 응했다. 이어서 17일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 22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 23일 김성근 방송인프라 본부장, 29일 윤동렬 미디어사업 본부장이 차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파쇄했다. 마치 범죄조직이 자신의 흔적을 성급하게 지우듯 불과 2주 만에, 사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 11명의 절반이 훌쩍 넘는 7명이 자신의 동선과 행동이 모두 기록된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석 달도 안 돼 교체...무엇을 숨겼나

새 모델로 바꾼 지 석 달도 안 된 전화기를 또 다시 바꾼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전에 쓰던 기기까지 물리적으로 파쇄해 없앤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오정환 보도본부장은 자신의 전화기 파쇄를 지시한 뒤, 이 장면을 끝까지 직접 지켜봤다고 한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될, 반드시 파쇄해 없애야 할 내용들이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충실하게 따르며 구성원들을 팔아 송송장구한 ‘적폐 경영진’들이다. 그들이 없던 휴대전화 속에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내용과 메시지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이 증거들이 자신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할 거라는 생각에 인멸을 단행한 것이다.



김장겸, 넉 달 새 두 번 휴대전화 교체

전영배 소환조사 뒤 또 전화기 바꿔

이들의 증거인멸은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실행됐다. 김장겸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임박했던 8월 14일 휴대전화를 파쇄하고 두 달도 안 돼 또 다시 증거를 인멸했다. 두 번째 인멸은 국정원 MBC 장악 사건과 관련해 전영배 전 보도본부장이 소환되고 사흘 뒤인 10월 13일 이뤄졌다. 국정원과 한 몸이 돼 MBC 내부 정보를 넘겼던 전영배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부장은 김장겸이었다. 사실상 보도국을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의 실세 부장, 김장겸은 전영배의 소환조사로 위협을 느꼈을 것

이고, 두 달 만에 다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최승호·박성제를 이유 없이 해고 했다’던 백종문도 수차례 증거를 없앴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되기 전인 6월 5일 새 전화기를 받아간 백종문 역시 8월 22일 똑같은 모델 똑같은 색상의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한다. 뭔가 긴급하게 없애야 할 것이 있지 않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반복적 증거 인멸, 반드시 단죄해야

지난 9월 5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한 김

장겸은 “당당하게 조사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행위를 하겠냐”며 뻔뻔하게 반문하던 그는, 돌아서서는 범죄의 증거를 착실히 지워나간 것이다. 김장겸과 그 일당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피의자가 된 것도 모자라, 임원의 권한을 악용해 증거를 없앴다. 이들이 인멸한 증거는 단순히 휴대전화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난 7년여 간 김장겸 일당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의 증거를 모두 지울 순 없다. 우리는 엄정한 법의 칼날 앞에서 그들이 꺾음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 동원 ... 증거 인멸 신종 수법

김장겸 일당의 조직적인 스마트폰 증거 인멸에 사용된 장비는 하드디스크 전용 파쇄기였다. 삼암사옥 경영센터 지하 1층 PC 창고실에 비치된 회사 장비다. 가로 80cm, 폭 112cm, 높이 123cm 크기로 가정용 드럼 세탁기보다 다소 크다. 5마력짜리 강력한 모터가 2개의 칼날을 돌리면서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방식인데, 사용법은 간단하다. 투입구에 휴대폰을 넣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초도 안돼 휴대폰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잘게 조각난다. 이렇게 되면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버리는 '디가우징' 장비의 경우, 자기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파쇄기는 아예 형태가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럴 필요조차 없다.

MBC는 이 장비를 올해 2월에 1,8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 이 장비의 원래 용도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노후 PC나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파쇄하는 것이다. 과거엔 외부 업체에 맡겼

지만 정보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수시로 저장 장치를 파쇄할 필요가 생겨 구매했다고 한다. 그런데 MBC 내에 이런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더군다나 스마트폰을 폐기하면서 이 장비를 사용하려는 직원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도 김장겸을 비롯한 임원들은 공교롭게 이 장비로 스마트폰을 없앴다. 심지어 8월 14일엔 김장겸, 오정환 2명이 동시에 이 장비를 이용했다. 서로 증거 인멸을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무슨 부당 노동행위를 했겠냐며 뻔뻔하게 항변하던 김장겸 일당이 뒤로는 이런 모의를 작당하고 실행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서 파쇄기 20여 대를 대량 구입했던 박근혜 청와대, PC를 쇠망치로 때려 부수라고 지시했다는 최순실, 심지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라고 했다는 대처 문건까지, 범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와 그 방식에서 국정농단 적폐 세력과 MBC 경영진의 행태는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 빼닮았다



지난 6월 5일, 백종문의 스마트폰이 파쇄되는 장면 10초 만에 스마트폰은 0.5~4cm 크기의 조각들로 잘게 분쇄돼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불법 행위에 증거인멸까지 ... 구속 수사 해야

김장겸은 지난 8월 14일 자신의 비서에게 하드디스크 파쇄기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파쇄하도록 시켰다. 당시는 고용노동부 현장 실사가 끝난 뒤 김장겸, 백종문, 최기화 등 경영진 소환이 임박한 시점이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장겸 등 경영진들이 증거를 인멸한 명백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지체 없이 구속해야 할 것이다.

증거 인멸 교사, 징역 5년 벌금 700만 원

이뿐만이 아니다.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려다 치러야 할 죄값만 더 커졌다. 김장겸이 자신의 비서

를 시켜 증거를 인멸한 건 명백한 증거 인멸 교사 행위다.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 증거 인멸을 교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제155조 1항) 또한, 임원 11명 중 7명이 동시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이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증거 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드러난 것만 이렇다는 얘기다. 또 얼마나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 왔는지 모를 일이다.

검찰에 증거 제출... 끝까지 처벌받게 할 것

이 같은 증거 인멸 범죄에 회사 공금이 들어갔다는 것도 참기 어렵다. 100만 원 가까이 하는 휴대폰을 함부로 파쇄한 뒤 또다시 고가의 새 제품을 지급 받았다. 2년 약정을 한 뒤 해지하다보니

위약금만 해도 적지 않다. 안 써도 될 공금이 7백만 원에서 천만 원 가량 낭비된 것이다. 노동조합은 해당 증거를 서울 서부지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조합은 추가 접수되고 있는 범법 경영진과 국부장급 간부들의 대대적인 문서 파기 등 증거 인멸 행위와 추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의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송 장악, 공영방송 훼손' 등 가당치 않은 어휘들을 써가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자들이 뒤로는 제 살 길을 찾겠다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김장겸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고 실상을 낱알이 파악해야 한다. 이들을 철저히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증거를 인멸해도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사장 공개 검증 D-3 MBC 구성원도 참여

13명 후보 등록 ... 최종 3인 압축 이후 공개 정책설명회

MBC 재건을 이끌어 갈 차기 사장 후보들의 공개 검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마감된 사장 후보 공모 결과 모두 13명의 후보가 응모 서류를 제출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오는 30일 사장 입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고, 다음달 1일 오전 11시 MBC 상암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에서 최종 후보 3명의 공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차기 사장은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폐허가 된 MBC를 바로 세우고, MBC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MBC를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내고, 방송 강령에 따라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물이 차기 사장으로 선임돼야 한다.

시민 100명·MBC 구성원 70명 공개 검증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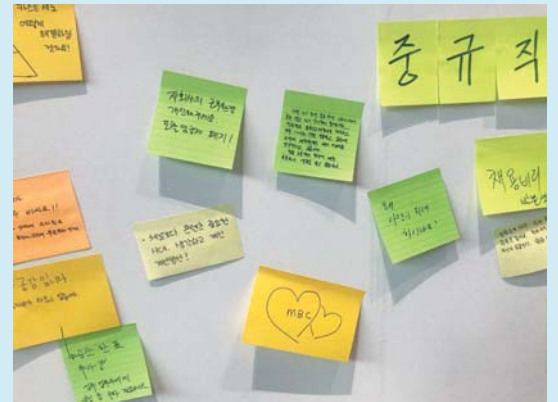
i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최종 후보 3명은 각각 20분 동안 MBC 재건을 위한 청사진과 공영방송 철학 등을 프리젠테이션 문서 20장 이내로 밝혀야 한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 100명과 MBC 구성

원 70명이 선착순 신청을 통해 방청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책설명회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되는 등 방문진은 이번 설명회를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도중 질의응답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민들은 iMBC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남길 수 있고 이 질문들은 다음달 7일 진행될 최종 면접 과정에 반영된다. MBC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는 것은 MBC 역사상 처음이다.

사장 후보에게 묻는다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개선안이 있나요?”,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입니까?” 어제부터 MBC 로비에 이런 질문을 담은 메모지가 붙기 시작했다. 조합이 마련한 ‘사장 후보자에게 질문 있습니다!’ (사진) 라는 프로그램이다. 제목 그대로 작은 메모지에 사장 후보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적는 것이다.

첫날부터 수십 개의 질문이 들어왔다. 제작비 현실화 방안, 인력 구조 개편 방안 등 회사에 대한 바람과 걱정이 묻어나는 질문이 많았고, 밥값 근무 등이 많은 만큼 노동조건에 대한 질



문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공감이 가는 질문 아래에는 ‘공감입니다’라고 적은 메모지가 덧붙여 달리기도 했다.

조합은 여기서 취합한 MBC 구성원들의 질문을 방문진에 전달해 12월 7일 최종 면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낙하산이 내려오던 사장 선임 구조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초의 시도다.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 ‘전국언론노조MBC본부’를 검색해 친구를 맺은 다음 1:1 채팅으로 질문을 보내면 된다.

‘음수사원’ 대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파업 중단 이후 첫 사내 집회가 열린 지난 21일, 상암사옥 로비에 걸려 있던 ‘飲水思源 掘井之人’ (음수사원 굴정지인) 액자가 가려졌다. 대신 그 자리에 내걸린 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었다. 굴욕과 적폐의 역사를 지우고 세월호를 기억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2014년 MBC가 상암동으로 이전하면서 로비에 내걸린 이 ‘음수사원’은 김재철-안광환-김장겸 등으로 상징되는 적폐 체제를 상징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한 문인이 폐망한 조국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글귀에서 유래한 사자성어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폐의 시절 MBC에서는 전혀 다르게 읽혔다. ‘월급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 더 나아가 ‘월급 주는 경영진의 말을 잘 따르라’는 억압의 메시지가 었다. ‘음수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MBC 주주인 정수장학회에 하사한 휘호이기도 했는데, 적폐 경영진들은 이 문구에서 개발독재의 향수만을 느꼈던 게 분명하다. 안광환 체제의 경영진은 이 글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까지 했다. 자신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 치욕스러운 글귀를 가리고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 대신 자리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권력의 MBC에서 국민의 MBC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다. 이제 이 다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가 우리 MBC 구성원들에게 과제로 남았다.